

## 5개 기관 해양안보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안보

박진 (전 외교부장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게 해양안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직결된 생명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제주평화연구원은 2024년 10월 11일 국내의 4개 유관기관들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식에서 박진 前 외교부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해양안보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 전 외교부장관입니다.

오늘 “글로벌 해양 패권 경쟁시대의 국가해양안보정책과 추진전략”에 대한 해양안보 공동학술회의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안보에 대해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로, 역내 현안 해결과 미래 질서 형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치고 있음.*

*인도-태평양은 우리 국운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음. 이제는 '해양 안보'와 '해양 협력', 그리고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과학기술이 국가적인 핵심 이익으로 떠오르고 있음*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기여하면서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인태 전략의 기본 목표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로, 역내 현안 해결과 미래 질서 형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였고, 12월 28일에는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아시아시피 인도-태평양 지역은 21세기에 들어 경제적·지정학적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역을 글로벌 해상 운송의 절반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태 지역은 또한, 한국 대외 무역의 70%를 차지하며,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66%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태평양은 우리 국운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양 안보’와 ‘해양 협력’, 그리고 해양자원개발과 해양과학기술이 국가적인 핵심 이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은 우리 국익에 사활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를 구축하고,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내 비확산·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고, 포괄 안보 협력 확대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그리고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등 중점 과제들을 추진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기여하면서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인태 전략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개발과 해양자원을 둘러싼 분쟁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안보 상황은 엄중합니다. 북한은 서해에서 군사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이 지역에서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새로 건조하여 수중 미사일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물론, 특히 해양에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 해양 경계 문제도 지속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북방한계선(NLL)을 불인정하며, NLL 인근에서의 군사 훈련과 도발을 통해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과거의 남북 경제 협력이나 평화 통일을 강조했던 정책 노선을 폐기하고, 대신 군사적 대결과 북한의 독자적 생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한반도의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평화적 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서해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증대시키면, 한반도 전반의 안보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를 벗어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분쟁의 가능성은 영유권, 해양 관할권, 해양 자원, 군사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중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은 해당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권 분쟁은 중국의 해양 확장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갈등이 있지만, 잘 아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임. 특히,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해양개발과 해양자원을 둘러싼 분쟁도 일으키고 있음.*

*김정은 정권이 평화적 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서해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증대시키면, 한반도 전반의 안보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시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우리의 확고한 독도 수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관할권 문제는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및 한국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에서의 EEZ 경계를 두고 갈등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해양 자원 탐사 및 개발을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양 확장 정책의 핵심 지역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도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중국해가 글로벌 해양 긴장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활동 분야에서도 긴장 요인이 커지고 있음.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중국은 핵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이미 '랴오닝호'와 '산둥호' 항공모함을 배치했으며, 세 번째 항모인 '푸젠호'도 지난 5월에 첫 시험 항행을 하고, 곧 작전 능력을 갖추 예정임.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해양 영향력을 억제하고, 반접근 및 지역 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한국과 중국 간에는 서해에서의 어업권, 해양자원 채굴, 군사적 활동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선들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우리의 해상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자원 분야에서, 동중국해와 서해는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해역으로, 이 지역의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의 천연가스전을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 갈등은 해양 분쟁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 어업 자원 역시 분쟁의 요인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과도한 어업 활동이 주변국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며, 한국과 일본의 해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어업 문제가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활동 분야에서도 긴장 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이미 '랴오닝호'와 '산둥호' 항공모함을 배치했으며, 세 번째 항모인 '푸젠호'도 지난 5월에 첫 시험 항행을 하고, 곧 작전 능력을 갖추 예정입니다.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해양 영향력을 억제하고, '반접근 및 지역 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군의 활동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우고 있으며,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응 활동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경쟁은 해양 분쟁을 첨예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해양 분쟁은 각국의 해양 전략과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만큼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대만 해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 가능성에 대한 안보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하에서 중국은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미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잠재적인 충돌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탐구하는 전쟁 게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전쟁의 당사자 모두가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대만해협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군사적 역지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만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긴장을 관리하는 것이 전쟁을 피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 분쟁을 관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외교적 대화와 분쟁 조정 메커니즘이 중요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

*동북아시아의 해양 분쟁은  
각국의 해양 전략과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만큼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대만  
해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  
가능성에 대한 안보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해양 분쟁을 관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미·중간의 외교적 대화와  
분쟁 조정 메커니즘이 중요  
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  
되어야 할 것임.*

그런 의미에서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의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해양 안보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rules-based maritime order)'와,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 수송로 안보에 대한 공동 이해를 표명했음.

작년 8월에 미국에서 열린 'Camp David 한·미·일 정상 회의'에서는 해양안보협력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명확하게 천명했고, 그 후속 조치로 올해 7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 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했음.

일본 3국 간의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해양 안보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에너지 자원, 상품 교역의 전략적 해상 수송로이며, 세계 해상 물류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40% 이상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원유 수입의 80% 이상이 이 수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rules-based maritime order)'와,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 수송로 안보에 대한 공동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작년 8월에 미국에서 열린 'Camp David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해양 안보협력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명확하게 천명했고, 그 후속 조치로 올해 7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 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 "인태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매희 지역의 군사화, 해안 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동,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메시지에 이어서
-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 그리고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등입니다.

한·미·일 3국은 작년 10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첫 연합공중훈련을 한 데 이어서, 올해 6월에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최초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Freedom Edge)'를 실시하였습니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과,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 구조, 해양 차단, 사이버 방어 등을 실시했고, 향후 한·미·일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연합 훈련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국은 미국, 호주와 함께 2021년에 'AUKUS 협정'을 체결하여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지원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퀴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2021년 8월 부산 해역에서 훈련할 때, 저도 국회 외교통위 위원으로서 항모에 승선해서 작전사령관, 함장, F35B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를 비롯한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10월 미국의 제5항모강습단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을 때, 외교장관으로서 방문해서 강습단장 및 함장의 안내로 장병들을 만나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해상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모와 호위함 등 함정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또한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생산 등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4월 AUKUS 3국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등 첨단 군사기술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Pillar 2’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고, 한국, 캐나다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또한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생산 등 방위  
산업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됨*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인태 지역에서 해상 수송로 보호, 국제재난안전 협력 등을 위해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공유 및 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하던 2022년 5월에 동맹 및 파트너국과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을 촉진 하기 위한 IPMDA(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인태  
지역에서 해상 수송로  
보호, 국제재난안전 협력  
등을 위해 ‘해양영역인식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공유 및 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또한 한국전 주요 참전국이며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호주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호주는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대잠수함전 훈련과 같은 해군 훈련, 정보 공유, 기술 협력은 한국의 역내 해양안보에 대한 분명한 기여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은, 호주의 해상방어 능력을 크게 증대시키는 한편,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역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호주는 AUKUS와 QUAD의 회원국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에 참여하고 있고, “말라바르 해군 훈련”을 통해서 대잠수함 전에 해상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또한 해양 영역 인식,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불법 어업과 밀수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활발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에 이어 한국이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고 있는 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호주는 해양안보 관련 전략대화와 정책 협의는 물론이고, 해양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특히 해양 플라스틱 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첨단 과학 기술력, 특히 조선 및 방산 기술 분야는 한국이 지역 해양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의 첨단 과학 기술력, 특히 조선 및 방산 기술 분야는 한국이 지역 해양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선도적인 잠수함 및 해군 함정 제조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독도급 대형 상륙함을 비롯하여 다양한 해군 함정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3천 톤급 중(重) 잠수함인 KSS-III 잠수함 프로그램은 스텔스 기술 및 탄도미사일(SLBM) 기능과 같은 첨단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함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군 함정 제조에는 여러 방산 기업들이 협력하여 무기 시스템, 레이더, 통신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잠수함과 전투함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해양방위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함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해군 함정 제조에는 여러 방산 기업들이 협력하여 무기 시스템, 레이더, 통신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음. 이는 한국이 해양방위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은 인태지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 안보 및 해양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은 기존의 ‘신남방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아세안 및 인도에 초점을 맞추어 무역 통상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증진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신흥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들과의 공동 선언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인태지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 안보 및 해양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은 기존의 ‘신남방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아세안 및 인도에 초점을 맞추어 무역 통상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있음.**

한국은 베트남에 해양 감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해양 경계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양국은 해상 경비대 간의 협력을 통해 불법 어업 단속과 해양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209급 잠수함을 공급하고, 현지에서 추가 잠수함을 건조하는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말레이시아와는 해양법 집행 및 대잠수함전훈련을 통해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합동 해상 훈련을 통해 해양 범죄 대응 능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해군에 해양 감시 장비를 제공하고, 해양 기술 이전을 통해 해상 경비 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필리핀에 해양 순찰정과 경비함을 제공하여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불법 어업 단속 및 해상 밀수 방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속 해양 순찰정이 필리핀 해양 경비대의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에 프리깃함을 제공하여 해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2024.10.7.)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안보·원전 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각종 연합 훈련에 우리 군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해군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 해군은 대잠수함전,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해상 작전에서의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인도양과 동아시아 해역의 해상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인도 해군의 전투함과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기술 지원과 군사 장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퍼본 바와 같이,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해양안보를 지키고, 해양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중 전략적 갈등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제약 속에서, 한국은 역내에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해양 안보를 지키고, 해양협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음. 미·중 전략적 갈등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제약 속에서, 한국은 역내에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특히, 개발을 위한 해양 협력과, 첨단 해양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기여를 통해 역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합니다. 특히, 개발을 위한 해양 협력과, 첨단 해양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기여를 통해 역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해양안보 공동학술회의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 저자 약력

##### ■ 박진 (제40대 외교부 장관(2022년 5월~2024년 1월))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제18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함.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미협회 회장, 그리고 2004년에는 한영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1993년 2월~1996년 7월까지 대통령 공보 비서관, 그리고 1996년 7월~1998년 2월까지 정부비서관으로 근무하였음.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한 후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기획 및 감수: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jpi@jpi.or.kr](mailto:jpi@jpi.or.kr) **http://**[www.jpi.or.kr](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